

우리동네 자치경찰, 무엇이 달라지나요?

(자료제공: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 ☎ 02-2100-2265)



1 자치단체와 경찰이 함께 교통·방범시설을 신속개선합니다.

신호등, CCTV 및 거로등 설치 등 차안안전발생시

BEFORE

- 경찰에 신고
- 경찰에서 검토
- 자치단체에서 개선

AFTER

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밀원화로 신속하게 추진

2 학교폭력·실종 등의 사고처리와 피해자 복지 지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.

차안·인명발생, 자살위험 신고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발생시

BEFORE

- 경찰 출동
- 사건처리
- 사회복지기관 연계

AFTER

- 자치단체가 보유한 복지 명차(대여) 공유
- 신고 접수와 동시에 사회복지기관과 연계
- 신속한 추가 지원

3 재난재해시 자치단체와 경찰인력이 공동으로 대응합니다.

BEFORE

긴급한 구조·구호와 관련형 신고시 경찰·소방·자치단체간 혼란 가능성 존재

AFTER

신속히 투입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자치단체 주관으로 경찰 등과 공동대응

4 국가경찰과의 명확한 업무구분으로 치안서비스가 전문화됩니다.

국가경찰

- 광역 범죄, 의사, 장애, 보안 및 112 상황실 등 전국적·국외적 치안 서비스 담당

자치경찰

- 생활안전, 여성·청소년, 교통·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담당



☞ 「자치경찰제 도입방안」 세부 내용은 '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(<http://www.pcad.go.kr>)를 참고하세요